

#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 120분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 ■ 일반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 배점은 [문항 1]이 60점, [문항 2]가 40점입니다.
2. 답안을 구상할 때 문제지의 여백이나 문제지 내의 연습장을 사용하십시오.
3.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흑색 필기구만 사용하십시오(연필·샤프 사용 가능, 사인펜 불가).
4. 답안을 정정할 때 원고지 사용법에 따르십시오(수정 테이프·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불가).
5.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작성하고, 답란 밖에는 작성하지 마시오.

※ 답안지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 답안 작성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십시오.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 논술고사 (인문계열)

**[논제]**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토론 상황이다. 기본소득은 고용 여부, 소득 및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고, 특정 생애주기나 사회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와 구분된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 < 다 음 > —

**주장 1:**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

**주장 2:**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 < 조 건 > —

1. 제시문 (가)~(바) 가운데 세 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조건 1에서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세 개를 활용하여 반론을 제기할 것.
3. 반론에서 제기된 논거들을 각각 재반박하여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제시문 (사)의 <자료 1>~<자료 4>를 활용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700자±70자, 40점)

— < 조 건 > —

1. <자료 2>~<자료 4>를 모두 활용하여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안을 <자료 1>에서 두 개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할 것.
2. 선택한 두 개의 정책안 중 하나를 골라 [문항 1]에서 자신이 선택한 주장을 정당화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가) 알래스카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로 외지인들이 유입되고 나가는 순환을 자주 겪으면서 자원기반 경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업 수익이 거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알래스카 주 의회는 공유재인 천연자원으로 얻은 수익이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976년에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만들어 1980년대부터 주민들에게 매년 1천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분배해 오고 있다. 알래스카 주민은 자원의 직접적인 소유주도 아니고 또 자원 개발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을지라도 모두 일정한 개발 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의 경제적 소외와 자원 고갈로 인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원에 대한 알래스카 주민의 공동 권리를 인정하는 함의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생산 활동은 일정한 자연적 조건을 토대로 삼고 있고, 사회가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인프라와 지식기반,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산 역시 비록 인공적이긴 하지만 대지, 물, 공기, 자원 등과 같은 공유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4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그 기술의 성격상 익명의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공유재의 성격이 강하다. 한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이러한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가진 주자인 셈이다. 기업의 수익이 주주에게 적절하게 배당되듯이 모든 사회 구성원은 공유재를 활용한 경제활동의 수익으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경제』 활용

(나) 고대 그리스 인들은 일을 두 가지로 구별하였다. 먼저 사적 영역에서 가계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포노스(ponos)’라고 불렀다. 포노스는 비탄을 의미하는 ‘포에나(poena)’에서 유래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살림을 꾸려가는 데 요구되는 고되고 힘든 노동을 의미한다. 반면에 ‘프락시스(praxis)’는 생계 유지를 넘어선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 활동을 말하는데, 폴리스에 기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 작업과 행위로서의 모든 노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계의 존속이 공동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포노스 역시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자유민들은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만으로는 덕을 행하는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가사 노동이 있다. 아이를 키우고 아픈 가족을 보살피며 집안을 가꾸는 가사 노동은 오랫동안 공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적 영역에 속한 노동으로만 간주되어 왔다. 공동체의 근간을 담당하는 이러한 노동은 가정뿐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금노동 중심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사 노동의 주체와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그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사 노동뿐 아니라 노동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사적 영역의 활동은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떳떳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공동체의 존립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활용

(다) 사회권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념사적으로 ‘물질적 궁핍’과 관련된 제한적인 의미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빈곤, 질병, 장애, 노후, 실업 등이 더 이상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급부를 국가에 청구하는 권리로 발전했다. 이는 사회권이 개인의 권리로서 실현되어야 하고 그 이행을 규범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했다.

사회권의 실현은 국가의 적극적 급부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재정을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국가 재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권을 향유해야 하는 모든 개인 중에서 누구의 사회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는 사회권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다. 사회권은 그 성격상 말리부 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는 부유한 사람보다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와 가치를 우선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는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부족하고 정치 과정에서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쉽다. 따라서 많은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정치와 법』 활용

(라) 태초의 지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공유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대지는 누군가의 소유다. 국가나 공공의 소유지도 존재하지만 많은 부분은 개인의 소유지다. 태초에 모두의 공유물이었던 지구가 어떻게 이러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었을까? 로크(J. Locke)는 가치를 생산해내는 노동에서 그 답을 찾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노동과 손으로 한 일은 온전히 자신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주는 것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고 거기에 자신의 것을 보탬으로써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된다. 노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공유물의 상태에 무언가가 부가되고, 그 부가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공동의 권리를 배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샘에 흐르는 물은 만인의 것이지만 주전자 안의 물은 그 물을 퍼낸 사람의 것임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노동을 통한 사적 소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를 통해 인류의 공동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다. 사적 소유권을 통해 토지가 개간되고 경작되는 경우 버려져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낳는다. 개간하고 경작한 1에이커의 토지가 황무지인 채로 버려진 1에이커의 토지보다 몇 배의 산출을 낳는 것은 자명하다. 즉 사적 소유권의 인정은 인간이 더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개인의 재산은 물론 인류 공동의 자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에 근거한 사적 소유의 보장은 반대로 인류가 소유한 재산 중 어떤 것이 정당하고 또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 자기 노동에 의거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고등학교 『경제』, 『윤리와 사상』 활용

**(마)** 포드 2세(H. Ford II)는 자동화된 자동차 공장을 함께 둘러보던 미국 자동차 노조위원장인 로이터(W. Reuter)에게 조롱하듯, “위원장님, 저 로봇들로부터 노조회비를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라고 물었다. 로이터는 곧장, “회장님, 저 로봇들에게 어떻게 차를 팔 생각이 십니까?”라고 맞받아쳤다.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동차, 의료, 금융, 가전 산업의 대부분은 수억 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필요로 한다.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시장에 투입된 자본의 총액뿐 아니라 개별 수요에서 나온다. 경제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한 주체는 개인이다. 개인의 소비는 미국 GDP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총수요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대규모 시장경제에서 소비자들 간 구매력의 분배는 매우 중요하다. 소득이 소수에게 극단적으로 집중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이 낮기 때문에 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인 롬니(W. M. Romney)의 예를 들어보자. 2010년에 그의 소득은 2,170만 달러였다. 롬니가 훨씬 더 사치스런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는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지출하는 비용은 총소득의 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금액이 예컨대 5백 명의 사람들에게 43,400달러씩 분배된다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소비에 지출될 것이다. 이는 소비하지 않는 로봇이 노동하게 될 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구매력을 갖춰 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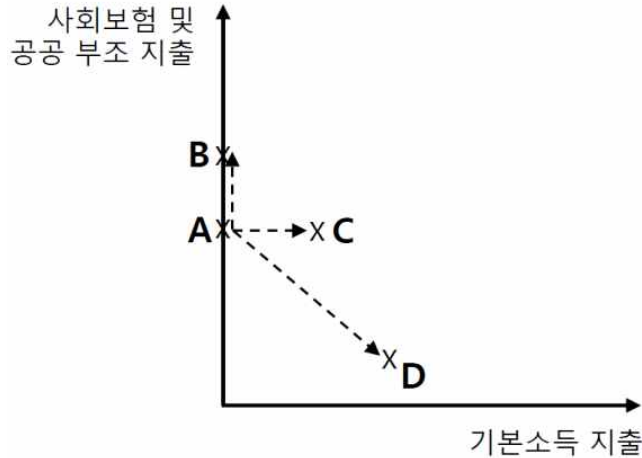
**(바)** 일본어 ‘프리타’는 프리(free)와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로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프리타는 1990년대 등장한 신조어로 당시로서는 어딘가 해방적인 울림이 있었다. 거품 경제 시기였기에 일자리 수요가 폭증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금도 크게 올라서 파트타임으로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며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래서 종신고용으로 기업에 묶인 샐러리맨들을 야유하며 기업 사회에 거리를 둔 채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노동 방식을 위해 자발적으로 프리타가 된 젊은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등장은 가정보다 회사를 중시하고 평생 일만 하며 경제적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오던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징후이기도 했다. 프리타는 조직 문화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자 경제적 동물로 살지 않으려는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프리타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취미 생활과 소소한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필요한 돈이 모이면 주저 없이 일을 그만두고 최소한의 돈만 벌며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즐기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청년 세대의 취업 기피 성향으로 인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고 사회 발전이 정체된다는 것이다. 프리타의 숫자가 증가하고 전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프리타는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겠다는 저항적 의미보다 점차 일본 사회의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활용

(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갑(甲)국’은 현재 사회보험과 공공 부조로 이루어진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갑국은 새로운 복지정책의 하나인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 1>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A, B, C, D 네 가지 복지정책안(案)의 특징을 나타낸다.

<자료 1> 갑(甲)국의 복지정책안



- 주 1) A안은 현재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함.
- 주 2) 각 정책안의 복지예산과 재정마련 방안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함.

<자료 2>부터 <자료 4>는 각각의 정책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 시행 5년 후의 경제활동인구, 복지예산 집행, 소득분포 등에 관한 성과를 추정한 결과다. 각 자료가 정책 성과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자료 2>는 각 정책안에 따른 20대~40대 연령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추정한 결과다. 5년 후의 산업구조 및 노동에 대한 수요는 현재와 같다고 가정한다.

<자료 2> 각 정책안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변화(추정치)

정책안	5년 후		정책안	5년 후		
	현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현재	경제활동인구
A	경제활동인구	93.5%	B	경제활동인구	93.2%	6.8%
	비경제활동인구	5.9%		비경제활동인구	5.2%	94.8%
C	경제활동인구	87.3%	D	경제활동인구	86.9%	13.1%
	비경제활동인구	2.8%		비경제활동인구	2.2%	97.8%

주) 표 안의 수치는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각각 100%로 보았을 때 5년 후의 값임. A안을 예로 들면 현재 경제활동인구가 1,000명이라면 5년 후 935명은 경제활동인구가, 65명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됨을 의미함.

<자료 3>은 각 정책안에 따른 복지예산의 집행 실적을 지급 대상 적격성과 실제 수급 여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안의 수치는 총 복지예산(기본소득 포함) 중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분류된 금액의 비율을 추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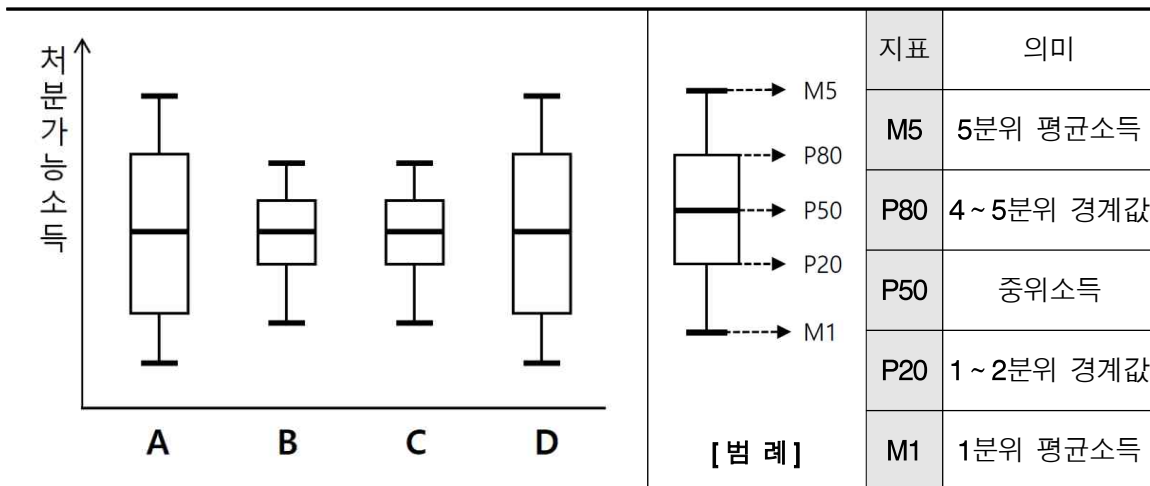
<자료 3> 적격성과 수급 여부에 따른 복지예산 집행 실적(추정치)

	정책안	2사분면	4사분면
	A	4.2%	5.2%
	B	4.1%	4.4%
	C	1.2%	1.8%
D	1.0%	1.5%	

<자료 4>는 각 정책안의 추진으로 예상되는 소득분포에 대한 그림이다. 소득분포는 아래 식을 통해 산정된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5분위 분류법에 따라 도출하였다. 시장소득은 근로나 자산을 통해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고,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의 복지급여(기본소득 포함)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 등의 소득을 말하며, 공적 이전지출은 세금·건강보험 등 국가에 납부하는 비용을 나타낸다.

$$\text{처분가능소득} = \text{시장소득} + \text{공적 이전소득} - \text{공적 이전지출}$$

<자료 4> 각 정책안에 따른 소득분포(추정치)



고등학교 『통합사회』, 『경제』 활용







